사 설

누구를 뽑을 건가

오늘은 17대 총선 투표일이다. 선택의 날이다. 어느 선거인들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을까마는 국회의원 299명을 뽑는 이번 총선은 큰 의미를 갖는다.

유권자의 오늘 선택은 우리 4년의 운명을 좌우한다. 그 영향이 4년 이후의 미래와 후손에게까지 미치는 것도 물론이다. 이번에 국회의원들을 제대로 뽑아야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유권자들은 냉정해져야 한다. 정당들의 엄살이나 감정에 호소하는 행벌이식 표 구걸에 속지 말아야 한다. 자신들은 정의이고 상대 정당은 불의라는 과장에도 현혹될 필요가 없다. 중립의 위장을 쓰고 내밀하게 지지하는 정당을 위해 상대 정당 후보에게 불량딱지를 붙이는 당당하지 못한 행태에도 속으면 안 된다.

또한 유권자의 카타르시스를 위해 주권을 행사하는 것도 곤란하다. 소중한 기회를 분풀이나 지역이기주의에 써버리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갈 길이 바쁘다. 수출에만 매달리는 불균형 경제는 한 걸음만 잘못 디뎌도 나락으로 떨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 북핵문제와 대미관계·이라크 파병 등의 외교·안보 현안들은 시시각각 상황이 변하면서 그때그때 정부와 국민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청년실업·고(高)유가·바닥에 이른 경기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 모든 상황을 감안해 후보들의 면면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누가 우리의 먹고사는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국회에서 능력을 펼쳐 보일 수 있을까 따져야 한다. 나라의 안보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할 수 있는 후보인지를 들여다 봐야 한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는 감정과잉 상태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유권자에게 강요하는 정치인들이 넘쳐난다. 단식·삭발·낙루·3보1배 등의 극단적인 행동에 마음이 흔들릴 게 아니라 과연 이들이 언제 민생을 위해 이런 고행을 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자신의 당선보다는 나라의 앞날과 국민의 삶의 질을 위해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할 후보를 흙 속의 진주를 찾는 마음으로 가려내자.

물가는 뛰고 불황은 계속되니…

물가가 갈수록 심상찮다. 연초 원자재를 중심으로 들썩거리기 시작한 물가가 가파른 오름세를 타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 원유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가격이 41개월 만의 최고 수준인 배럴당 32달러를 웃돌면서 물가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올 1~3월에만 지난해 동기 대비 3.3% 올랐다. 벌써 물가 억제 목표(3%)를 넘었다. 서민들의 체감 물가 오름세는 더 심각하다. "장 보러 가기 겁난다"는 아우성이 여기저기서 들린다.

전망은 더욱 어둡다. 총선 때문에 미뤄졌던 버스·지하철·택시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줄줄이 예정돼 있고, 밀가루·라면·음료 등 생활필수품과 농산물 가격도 속속 오르고 있다. 고유가의 여파로 석유 관련 제품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이는 각종 개인서비스 인상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정책과 개발 계획을 쏟아낸 데다 주춤하던 부동산 값이 다시 들먹이는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 400조원에 이르는 부동자금도 물가에는 부담을 주고 있다. 경기회복 전망은 불투명한데 물가는 급등하고 있어 이러다간 스태그플레이션(성장은 낮은데 물가는 뛰는 현상)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걱정이다. 물가상승은 특히 서민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준다. 실업난과 불황, 신용불량 등으로 가계수입이 줄어 가뜩이나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판에 물가마저 이처럼 급등하면 서민들은 설 땅이 없다.

물론 정부로서는 경기를 고려할 때 치유법이 쉽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물가안정에 최우선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야 한다. 매점매석을 단속하고, 수급을 원활하게 하며 공공요금 인상은 가능한 한 억제하는 등 물가상승 압력을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고물가는 사회갈등으로 이어진다. 물가 상승으로 인한 국민의 실질적 수입 감소는 경기회복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국정의 최우선 목표가 민생 안정이라면, 그 첫걸음은 물가 안정에 있다.

드러나는 북한 核의 실체

파키스탄 핵무기 개발의 주역인 압둘 카미르 칸 박사가 "5년 전 북한에서 완전히 조립된 형태의 핵폭발장치 3기를 목격했다"고 말했다. 칸 박사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대북정책 기조는 물론 6자회담에도 엄청난 파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물론 그의 언급이 사실인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칸 박사의 발언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는 데 있다. 그가 핵무기 전문가인 데다, 방북시점인 1999년은 그가 북한에 우라늄 핵폭탄 제조기술을 제공해 북한당국으로부터 칙사 대접을 받을 때다. 따라서 북한이 칸 박사에게 엄청한 모조품 같은 것을 보여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분석된다. 칸 박사의 발언이 그동안 한·미 정보당국이 파악하고 있던 내용에 근접하다는 점도 그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칸 박사의 진술은 한반도의 평화에 역행하는 매우 심각한 사태진전을 갖고 올 수 있는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북한이 1~2개의 조잡한 형태의 핵무기를 갖고 있을 것'이라는 관측만 있었으나, 이제는 관측을 넘어 북의 핵무기 보유가 '실제상황'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한반도 사태는 정말 심각한 국면으로 흘러갈 수 있다. 먼저 북한은 자신들이 핵개발에 매진할수록 이를 제거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도 강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우선 발상부터 바꿔야 한다. 핵 보유가 체제유지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북한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핵 보유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함을 알아야 한다. 중국을 포함해 주변 어느 나라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 빨리 포기해야 주변국의 경제적 협력을 빨리 받아낼 수 있다.

정부도 핵 보유 선언이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해 구체적이고 면밀한 대책을 미리 강구해둬야 한다. 핵 보유가 선언된다면 정상적인 남북관계는 불가능해진다는 점을 북한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북핵을 놓고 남남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인식을 일치시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믿음직한 후보 고르는 법

시 론

정 진 영
경희대 교수·정치학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17대 총선의 투표날이다. 주권자인 국민이 앞으로 4년 동안 자신을 대신해 국정에 참여할 대표자를 선출하는 뜻깊은 날이다. 오늘의 선택에 따라 나와 가족, 지역과 직장, 그리고 조국 대한민국의 미래가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유권자들은 신중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4년이 아니라 1년도 지나기 전에 잘못 뽑았다고 후회하고 국가의 미래를 걱정해야 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한다. 이러기 위해서 투표하기 전에 다음의 두 가지만큼은 꼭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첫째, 총선 후 한국정치의 바람직한 모습이다. 여야 및 주요 정당들 사이의 의석분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정치의 모습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여당은 정부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의석을 달라고 호소하고, 야당은 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거대 여당의 출현을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당 단독으로 또는 잠재적인 연합세력과 더불어 국회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국회가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기능은 약화되는 반면, 정부의 정책을 입법을 통해 뒷받침하는 기능은 강화될 것이다. 이에 비해 야당이 단독으로 또는 잠재적인 연합세력과 더불어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국회의 대정부 감시 및 견제기능은 강화되는 반면, 야당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어느 쪽이 더 바람직한지 아니면 덜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를 판단해 지지후보와 정당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 이라크 파병, 한·미동맹과 대북정책 등 굵직한 정치적 이슈들도 유권자의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우리 사회의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면서 이러한 이슈들을 중심으로 총선 후에도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여야는 모두 정쟁을 지양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정치인들이 매우 민감하게 생각하는 정치개혁도 상당 부분 달성되었다. 따라서 총선 후 한국정치는 상호 존중과 타협의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정치집단들이 대개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다는 독선적 태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람이나 정당은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고 비방하여 사회와 정치를 혼란시킨다. 이런 후보나 정당을 선택하면 조만간 후회하게 될 것이다.

둘째, 경제·교육 문제 등과 같은 주요 민생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절대 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대개의 경우 정치란 국민이 편안하게 먹고살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일 따름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경제불황·실업난·신용불량자·빈부 격차·농가 부채·물가 불안·사회 불안·공교육 붕괴 등등 굵직한 민생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유권자들은 지지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때 그들이 제시하는 정책대안이 우리 사회의 주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 방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차분히 따져보아야 한다.

물론 투표 당일에 이러한 평가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두 가지 간단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자신이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민생문제가 무엇인지 선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후보와 정당을 평가하는 일이다. 그 문제의 해결에 과연 어느 후보와 정당이 가장 적합하겠는가를 기준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 관련 문제의 경우 주요 정당들의 이념적 지향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보수 정당일수록 성장과 시장경제 질서를 강조하는 데 비해, 진보 정당일수록 분배와 사회적 합의를 강조한다. 투자 부진·실업난·산업공동화 등 주요 경제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어떠한 방안이 적절한지를 생각해 보면 정당과 후보자를 고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총선은 4년 동안 나를 대신할 대표를 선출하는 엄숙한 행사다. 믿음이 가는 후보와 정당을 신중히 선택해 나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자원봉사 뿌리 내리려면

지방에서는

김 도 종
원광대 교수·역사철학

지난해 119개 단체들로 구성된 전주시자원봉사연합회가 올해를 '자원봉사의 해'로 선포하고 전주를 전국 최고의 자원봉사 모델도시로 만들겠다는 야심 찬 포부를 밝혔다. 전주시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남녀 중 자원봉사 참여율이 17% 정도인데 이를 3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미국의 자원봉사 참여율 54%, 영국의 34% 수준을 따라가겠다는 것이다.

지자체 모델이 된 全州市

이 같은 민간계획은 전주시 당국의 절대적인 지원에 기초하고 있다. 전주시는 전국 최초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교육센터 건립계획을 세웠다. 총 2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고 그중 10억원을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놓고 있다. 또 전국 200여개에 달하는 자원봉사센터들의 워크숍을 상반기에 전주에서 열 계획이다. 전국 자원봉사박람회 등도 전주에 유치해 자원봉사의 중심도시가 되겠다는 의지도 갖고 있다.

현재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들이 모두 자원봉사센터를 개설하고 대구는 나눔넷 운동, 원주는 밥상공동체 운동 등 나름대로 특성화된 자원봉사를 기획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민간 참여단체들이 예전보다 높은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고 행정당국이 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점에서 전주시의 움직임은 분명 자원봉사의 전국적 확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화 사회의 임금노동과 달리 자원봉사는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즐거운 마음에서 하는 비영리 노동이다. 또 그런 점에서 자원봉사는 변화된 사회의 공동체 문화를 일구는 데 필요한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필수 요소다.

우리나라의 자원봉사 운동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다. 특히 학생 봉사활동은 개선돼야 할 점이 많다. 전주시가 2001년도에 시민 1000여명을 표본추출해 실시한 자원봉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들의 참여율은 28.6%, 대학생은 27.8%에 달한다. 학생 참여율이 절반을 넘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자원봉사는 미래의 건전한 시민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아주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현재 많은 중·고생의 봉사활동이 봉사점수를 얻기 위한 형식에 흐르고 대학생들의 활동 역시 단순히 축제나 체육대회와 같은 공공행사 진행을 돕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원봉사라 하면서도 시간제 노동과 같이 얼마간의 금전적 보상을 기대하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관행과 의식도 하루빨리 고쳐져야 한다. 자원봉사 운동에 대한 관의 지원 역시 조심할 필요가 있다.

민·관협력이 성공의 관건

전주시는 자원봉사의 민·관 파트너십을 비교적 잘 실현해 가고 있는 듯하다. 많은 다른 지자체가 자원봉사센터를 관에서 직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시는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연합회 산하로 해 민간단체들이 공동 운영토록 했다. 자원봉사교육센터가 건립된다 해도 교육·훈련은 역시 연합회 활동으로 돌 예정이다.

선진 자원봉사 활동은 시민 참여가 관건이다. 다행히 전주시의 경우 2002년 이후 학생 참여율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시민 및 시민단체의 참여는 증가추세에 있다. 전주시 자원봉사연합회는 앞으로 의료·법률·음악·무용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자원봉사 운동에 대거 참여토록 유도하겠다고 한다.

자원봉사가 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진정한 사회적 자본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시민들이 소외계층·소외지역에서 상생적 활동을 펴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것이 필수다. 전주시의 민·관 협력모델이 성공해 다른 지자체들에도 확산되길 기대해 본다.

바닷가 회원제 별장-속초「호텔 굿모닝」

보증금 290만원 15년후 환불

개관후 처음으로 소수의 창립회원을 특별히 모십니다.

高품격 서비스에 실용성을 더한 특징점
❖ 속초해수욕장에서 50m 거리로 신규 오픈한 가족호텔입니다.
❖ 개관후 창립회원 모집으로 예약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보장됩니다.
❖ 호텔급 시설·서비스에 비해 관리비가 저렴합니다.
❖ 15~25평의 각기다른 테마객실도 100% 취사가 가능합니다.

▶부대시설 : 스카이라운지, 한식당, 비즈니스클럽, 24시편의점, 로얄룸킴, 노래방, 가족단란주점 등

현재 개관 운영중인 실제건물

창립 회원님께 드리는 파격적인 혜택!
1 특급 호텔 수준의 名品 객실 제공
2 숙박 가능일수 연간 30박(성수기, 연휴, 주말 포함/ 평일 무제한)
3 1년간 조식 무료제공 (15평형 2인/ 20·25평형 4인 제공)
4 케익, 와인, 버터, 과일바구니 두료증정
5 HD초대형 디지털 대형 TV, 홈시어터 완비
6 가입금액 전액 완전보장-법률공정증서 발행
7 보증금으로 15년 동안 정회원 자격 이용
8 해저잠수함, 버다낚시, 유람선, 버나나보트 이용시 50%할인

호텔내부 VIP룸

추가 이용 체인망 제주중문, 지리산청학동, 남원, 울산, 부산, 경주, 수안보, 도고온천, 설악오식온천, 척산온천

Best Quality
Best Service
Best Satisfaction

■관광진흥법상 가족호텔(Family Hotel)은
호텔급 서비스에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로 객실 단위로 회원모집이 가능하고 구입한 회원권은 재산권 행사는 물론, 양도, 상수가 가능합니다.
●관광시설 : 호텔도 해당호텔 ●관광호텔 확인필 (대표이사 제100호)

■회원가입 보증금 납입방법
※보증금은 개관후 계좌으로 모시는 창립 회원가입입니다.

구 분	평 형	보증금	비 고	입금계좌
화이트비치	15평	290만원	15.4후 전액환불	기업은행 372-015158-01-058
테마비치	20평	370만원	연휴이 입금하여 평생연예	예금주 (주)선동레저산업
로얄비치	25평	470만원	양도·양수, 상속, 증여 가능	○신용카드 결제시 10개월 분납가능

굿모닝가족호텔
Goodmorning Family Hotel
■본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순화동 5-2 순화빌딩 1306호.
■호 텔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32-1(속초해수욕장 입구)

※법인, 단체별, 모임별 등 공동명의로 구입가능합니다.
※호텔 담사를 친하시는 고객님께는 고풍편이를 제공해 드립니다.

가입문의: 02)771-5400

입회첨 : 공휴일도 영업가능 전화를 주시면 자세한 자료를 빠스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